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분석·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Ⅲ):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분석·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수행과제명**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Ⅲ)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과제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 요약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국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여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 비해 법적·제도적 수준은 우수한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 격차 순위는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 2009년 이후 성 격차 순위가 개선되기보다 하락. 제도 도입 초기의 연구들은 단년도 성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조선주·유희정·김영숙·정가원·박수범·황정임·김동식·장윤선·권희정·김효주·손정민·정혜윤·나세원·김효진·김병권(2013).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Ⅲ):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지예·결산서를 토대로 한 단기분석 연구이거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성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거나 추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이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환류에 대해 구체적이고 나아가 거시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님.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연구임. 특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정부주도형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11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최근 성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제를 진단함.

---

## 1 배경 및 문제점

- 지난 2009년 법정서류로서 최초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래 올해는 다섯 번째 성인지예산서와 세 번째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해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 비해 법적·제도적 수준은 우수한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 격차 순위는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 2009년 이후 성격차 순위가 개선되기 보다 하락. 제도 도입 초기의 연구들은 단년도 성인지예·결산서를 토대로 한 단기분석 연구이거나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 성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거나 추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이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환류에 대해 구체적이고 나아가 거시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선도국의 제도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재정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 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행정부를 중심으로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인지예산 편성과정(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과 성인지결산과정(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은 단년도 일반예산 편성 주기 및 절차와 동일함.
- 정부의 예·결산과정과 성인지예·결산과정 비교·분석
  -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계획과정에서 일반예산제도의 중기 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중장기계획수립 과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음. 개별사업 위주의 단년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인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자원배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되어 있고 중점사업과 정책방향만 나열되어있는 상황임.

- 계획과정: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가 주로 단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편성과정: 일반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의 범주가 통합재정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아래(<표 1>)의 문제 발생
- 집행과정: 성인지예산은 회계정보 뿐 아니라 성별 수혜자료 등이 예산집행 시점에 즉각적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산 및 환류과정: 회계적인 부분 중심의 점검, 체계적인 활용·점검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

■ 해당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과정과 성인지예산과정 비교

예산과정	담당기관	예산업무	성인지예산업무
예산편성 (n-1년)	기획재정부, 각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li> <li>□ 예산편성 기본지침 작성·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적/중기적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 부재</li> <li>□ 성인지예산 작성 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분석 및 세입예측</li> <li>□ 예산요구서 제출</li> <li>□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예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협의, 재정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 시 주요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음</li> </ul> </li> </ul>
예산심의 (n-1년)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심사(상임위원회)</li> <li>□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상임위에 치중.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음</li> </ul>
예산집행 (n년)	각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배정·자금 배정</li> <li>□ 지출원인행위, 지출, 회계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 시점에 즉각적 성별영향 점검이 어려움</li> <li>□ 성별분리통계 생산</li> </ul>
결산 및 회계검사 (n+1년)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각 부처),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결산)검사</li> <li>□ 재정사업 자체평가</li> <li>□ 결산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결산서 작성</li> <li>□ 성인지결산 감사원 검사 미비</li> <li>□ 체계적인 성과관리 부재</li> </ul>

■ 예·결산 과정 이외의 문제점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가 낮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
-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의 교육 참여 독려가 부족하며,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공식 자문 조직은 없는 상태임.
-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좋은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계속 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방안은 실천될 수 없는 실정이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움.
-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점검 및 평가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임.

②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국회를 중심으로

-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심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는 「국가재정법」상 첨부서류(성인지결산서는 「국가회계법」상 부속서류임)이고 정부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법」에도 근거 조항이 없어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의 의무적인 심사대상은 아님.
- 국회의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관련 질의·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 개인의 관심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은 실정임.

■ 심의과정에 따른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성인지예산안 심의 과정

심의과정	예산안 심의		성인지예산안 심의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헌법」 §54 ② 「국가재정법」 §33	성인지예산서의 국회제출	「국가 재정법」
예산안의 본회의 보고	결산과 달리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음	「국회법」 §84①	별도로 하지 않음	-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의장은 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84①, ②, ⑥	일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예비심사함. 쟁점형성이 어렵고 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함	-
예결 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 ※ 예결위 심사절차 : 제안 설명(기획재정부장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 위원회심사 → 소위원회심사 → 토론 및 표결 → 심사보고	「국회법」 §84②, ③,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음	-
본회의 심의· 확정	본회의 부의 →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 토론 → 표결·확정	「헌법」 §54 ②	본 회의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음	-

■ 국회의 심사 현황과 심사 내용 분석

- 상임위원회 예산안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총괄),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결산 심사보고서, 본

#### 회의 회의록 분석

- 국회 본회의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논의는 전체 회의록 중 2.0%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 회의의 3.3%에서만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짐. 15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가족위원회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됨. 여성가족위원회(전체 62개 회의 중 32개, 51.6%)와 기획재정위원회(전체 145개 회의 중 11개, 7.6%)가 성인지예산 관련 논의 중 65.2%를 차지하며,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제도 내 관계부처의 정책성 문제에 집중하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도의 내용, 사업범위, 인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주요 심사내용은 주로 추진체계의 문제점, 미작성기관의 문제점, 작성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간혹 성인지예산서 작성 취지와 관계없는 지적도 있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인식변화나 역량강화, 미작성기관의 독려를 위한 사유서 제출, 고위직 공무원 교육 강화, 감사원의 결산감사 의무화, 관련 유사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안됨. 전반적으로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 도입 전과 초기에 비해 국회의 심의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 심의기반, 심의과정, 심의결과 활용 및 환류체계 분석

- 심의기반: 국회 내 성인지예산 심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임기로 체계적인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부처의 관심을 촉구하기에는 담당기관의 위상에 한계가 있고, 기타 상임위원회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기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상이 높지 않음.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국회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심의과정: 일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의 기준 및 내용이 구체화·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전반에 관한 논의,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가 예·결산 심의과정의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심사결과 활용 및 환류체계: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지 않음.

### ③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2011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올해 3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는 조사는 아님.
  - 제도 시행 초기의 2011~2012년 조사는 구체적인 예·결산서 양식이나 지침, 매뉴얼, 컨설팅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시행 경험이 축적된 2013년 조사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둬.
  - 특히 3개년도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의 추이 및 각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1~3차 조사개요는 <표 3>과 같음

〈표 3〉 1~3차 조사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모집단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공무원 (기획재정+세부사업)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공무원 (총괄결산+세부사업)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획재정+세부사업)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업 (총괄결산+세부사업)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기획재정+세부사업)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업 (총괄결산+세부사업)
표본크기	371개 사업	393개 사업	381개 사업
표본추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사업 리스트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11년 8월 4일 ~ 9월 2일	2012년 7월 12일 ~ 8월 10일	2013년 6월 7일 ~ 7월 31일

#### ■ 기술분석 결과

-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 일반사업 담당자 (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가 예산편성 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 기획재정 담당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응답(1차 조사결과 11.8%, 2차 조사결과 0%, 3차 조사결과 33.3%), 일반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1차 조사결과 35.9%, 2차 조사결과 37.9%, 3차 조사결과 51.5%)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 대부분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공무원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결산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보다 성인지결산 담당 공무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패널분석 결과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작성자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2.6) 이해도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인지예산제도와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작성자가 기획재정 담당자인 경우(+4.4)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횟수가 많을수록(+0.48) 예산편성과의 관계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정책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도 지표가 증가(+3.4)하는데 반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는 관계도 지표가 감소(-2.8)하였음. 또한 매뉴얼을 참조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뉴얼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하락했던 난이도가 3차 조사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 조사 시점에서의 변화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는 경우(-0.9)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 개선방안

### 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11.3.8)에 근거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첫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17개시·도 244개 시·군·구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사업의 수는 11,803개, 편성된 예산의 규모는 12조 6천  
 억원으로 일반회계 11,704개(99.2%), 편성된 예산은 12조 4천억원  
 (98.8%), 특별회계 99개(0.8%), 편성된 예산규모 1,522억원(1.2%)임  
 -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58개(59.8%) 6조 9천  
 억원(54.8%), 여성정책추진사업은 3,244개(27.5%) 약 5조원(39.6%),  
 그 외 자치단체 특화사업 1,501개(12.7%) 약 7천억원(5.6%)임.  
 - 기능별: 사회복지분야 5,443개(46.1%) 99,557억원(79%), 보건분야  
 1,519개(12.9%) 3,777억원(3%) 등의 순으로 작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서 작성 규모면에서 시범사업  
 대비 큰 증가를 보이며 순조롭게 연착륙하였다는 평가이지만 제도시  
 행 초기에 발생한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 및 16개 지  
 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됨.

〈표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회계별 현황

(단위: 개, 억원, %)

회계별	사업 개수	2013년도 당초 예산액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11,803	125,990	111,686	14,304	12.8
일반회계	11,704	124,468	110,367	14,101	12.8
기타특별회계	99	1,522	1,319	203	15.4

자료: 안전행정부(201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예산개요  
 및 기금운용개요, p.122

## ②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 대구, 대전을 중심으로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작성 모니터링 결과<sup>1)</sup>에 따르  
 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를 판단하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내부자료

기에는 어려움과 개선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를 판단하  
기에는 어려움과 개선 수요가 동시에 존재. 이는 성인지예산서의 질  
적 수준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전  
년도와의 연속성을 위해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선정

■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및 대상사업 선정

〈표 5〉 3개 지역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항목	부산	대구	대전
전체	- 사업 수: 361개 - 예산액: 328,157백만원	- 사업 수: 235개 - 예산액: 682,856백만원	- 사업 수: 189개 - 예산액: 368,717백만원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 여성정책추진사업 ·사업 수: 47개 ·예산액: 101,942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 258개 ·예산액: 194,321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 수: 56개 ·예산액: 31,894백만원	- 여성정책추진사업 ·사업 수: 48개 ·예산액: 431,702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 127개 ·예산액: 166,715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 수: 60개 ·예산액: 84,441백만원	- 여성정책추진사업 ·사업 수: 10개 ·예산액: 54,01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수: 160개 ·예산액: 279,539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업 수: 19개 ·예산액: 35,166백만원
대상사업 선정방법	-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 을 해당부서로 통보, 각 부서에서 결정하여 예산부서로 통보	-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 을 해당부서로 통보, 사업부서가 결정	- 예산부서와 성별영향 평가 담당부서가 함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담당자에게 통보, 성별센터가 컨설팅 통 해 보완

■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자치단

『체 성인지예산서』작성 공무원(부산시 본청과 16개 구·군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 대구광역시 본청과 8개 구·군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 대전광역시 본청과 5개 구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컨설턴트 등과 집담회를 실시

〈표 6〉 부산 지역 조사 분석 결과

항목	분석결과
유형구분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을 이해할 수 있음 38%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이 타당함 31% - 본인의 사업의 해당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33%
선정절차	- 사업담당이 선정 후 예산부서에서 검토 74% - 예산부서가 선정 후 사업담당에게 전달 13%
어려운 점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함 37%, 지자체 내 제도에 대한 무관심 15%
적절성	- 적절함 22% -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양성평등과 직접적 관련없음 40%, 이미 여성수혜율이 높음 17%, 성별 분리통계가 없음 16%

〈표 7〉 대구 지역 조사 분석 결과

항목	분석결과
유형구분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을 이해할 수 있음 31%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이 타당함 21% - 본인의 사업의 해당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23%
선정절차	- 사업담당이 선정 후 예산부서에서 검토 55% - 예산부서가 선정 후 사업담당에게 전달 40%
어려운 점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함 38%, 작성지침에 대상사업 선정관련 내용이 부족 18%
적절성	- 적절함 15% -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여성수혜율이 높음 38%, 양성평등과 직접적 관련 없음 36%, 성별 구분통계가 없음 16%

〈표 8〉 대전 지역 조사 분석 결과

항목	분석결과
유형구분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을 이해할 수 있음 35% - 대상사업의 유형구분이 타당함 29% - 본인의 사업의 해당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33%
선정절차	- 예산부서가 선정 후 사업담당에게 전달 83%
어려운 점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함 50%
적절성	- 적절함 18% -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양성평등과 직접적 관련없음 37%, 이미 여성수혜율이 높음 20%, 성별 분리통계가 없음 18%

#### ■ 지역별 공통점

- (선정기준)작성지침 상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세부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광역과 기초에 적용되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구분과 작성필수/작성권고 사업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음.
- (선정방법)성평등목표 수립 후 그에 적합한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함. 현재는 성평등목표 수립을 위한 위원회 등의 별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별 설명자료가 먼저 작성된 후 성평등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함.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가 필요함.

#### ■ 지역별 차이점

- (선정기준)대상사업의 단위가 개별사업-세부사업-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자체 재원사업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그러나 자체 재원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선정방법)대상사업 선정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특히 대상사업 선정 시 중앙부처와 전문가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에 있어 수위, 범위, 일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됨.

## 다.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단계를 넘어 정착단계로 들어섬으로써 제도의 성과측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법정서류로써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최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선진국형의 경우 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가 철저함. 일반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이고 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회 및 감사원의 감시 역할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함께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선진국형)

구분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헌법	재정법	성차별금지법	성평등법
도입시기	2010	2013	2006	2004 본격	2005 일부, 2006 전부처
예산서형태	예산서 부속서류	일반예산서	예산서 부속서류	예산서 부속서류	예산서 부록



구분	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시행주체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재정부, 연방수상실, 부처간 워킹그룹	재정부, 여성권리부	재정부, 성평등부, 부처간 워킹그룹	아동평등사 회통합부, 재정부
지원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여성평등 교육진흥원	-	-	JämStöd	부처간 작업그룹, 성평등정보 센터통계청
성평등담당관	-	-	-	○	-
조정위원회	-	-	-	-	-
성 격차 지수 순위	111/136개국	19/136개국	45/136개국	4/136개국	3/136개국

주: 노르웨이 부처 간 작업그룹 - 성평등사무국위원회+외부 전문가

■ 국제원조형의 경우는 원조가 끊기거나 줄어들었을 때 제도를 지속적  
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의회나  
감사원의 모니터링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음. 다수의 국제원조형  
국가는 각 부처 내에 성인지 담당관 또는 성인지예산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업무의 성 주류화에 힘쓰고 성인  
지예산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분석도구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초기에 국가들은 여성을 주 대상  
으로 하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제도  
를 운영하였으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음.

〈표 10〉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제원조형)

구분	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법적근거	성평등 관련 헌법, 국제적 약속	국가계획, 국제약속	헌법, 재정법, 국제약속	-	국가계획, 국제약속	여성권리 장전, 행정명령
도입시기	2005/ 2006 회계연도	2006/ 2007 회계연도	2006	2006/ 2007 회계연도	2006/ 2007 회계연도	1995
예산서형태	성인지 예산서	일반예산서	예산서 부속서류	예산서 부록	예산서 부속서류	예산서 부속서류
시행주체	여성아동 발전부, 재정부, 국가계획위 원회	여성가족 지역 사회개발부,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국가계획 위원회, 여성아동 사회복지부	재정부, 여성개발부	예산관리부, 국가경제 발전 위원회, 필리핀여성 위원회
지원기관	국가재정 정책기구, UNIFEM, Sanctetane	UNDP 말레이시아	UNIFEM, WorldBank, 기타국제 조직들	UNIFEM, UNDEP	UNDP Pakistan, 스위스개발 협력기구, 노르웨이 대사관, 영국정부, 의회, NGO PILDAT	UNIFEM, PIDS, DAP
성평등담당관	○	-	-	○	○	○
조정위원회	○	-	○	○	○	○
성 격차 지수 순위	101/136개국	102/136개국	129/136개국	121/136개국	135/136개국	5/136개국

주: 필리핀 PIDS -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필리핀 DAP -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

#### ■ 오스트리아

- (제도 도입 및 운영 형태)헌법에 근거를 둔 두 차례의 예산개혁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 그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접목하여 성인지예산을 제도화 함.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안의 성과목표 설정 시 성평등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부처/분야 수준에서 최소 1개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됨. 일반 예산안과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보를 담음.

- (성과관리)연방수상실의 성과관리부에서 예산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을 통해 파악하며 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의회에 보고함.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해 평가 결과는 이듬해 예산책정 시 반영하도록 권고
- (의회와 감사원의 역할)의회 예산국에서는 부처들이 설정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검토하며 의회 내 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을 비롯하여 예산관련 자문을 제공. 감사원에서도 예산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

#### ■ 프랑스

- (제도 도입 및 운영 형태)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총 18권 작성되는 통합정책보고서 중 성평등 관련 통합정책보고서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서에 해당: 프랑스는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나 이슈에 대해 관련 부처가 함께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합정책보고서에 담음. 통합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은 총리가 담당하며 여성권리부는 최종 통합정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로부터 보고서를 취합하는 역할을 함.
- (성과관리) 통합정책보고서에는 해당 부처가 실시한 성평등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마다 예산의 집행실적과 성과지표 등이 제시됨. 성과관리 시 예산집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 다음 연도 예산액이 당해 연도 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는 않음. 이는 성평등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예산의 증감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의 영향을 받은 것임.

- (의회와 감사원의 역할) 의회는 성평등에 관련된 통합정책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의회의 재정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집행된 이후 결과에 대한 검토는 시행하고 있음. 감사원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통합정책보고서에 담긴 각종 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 취합된 감사보고서를 의회, 총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

### 3 정책제언

#### 제안1) 성인지적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목표 수립 및 구현

-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계획과정에서 제도시행의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적 목표를 구현, 중장기적 관점의 자원배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12개 분야 각각의 양성평등 관련 주요 사업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13번째 새로운 분야(양성평등 분야)로 독립. 2안은 양성평등 관련 주요 사업들에 대해 향후 5년간 자원배분 계획을 명시하고, 이를 기존 중기재정운용 계획의 부속서류로 첨부. 3안은 분야별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게 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제안2)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적 작성지침 마련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편성과정)중에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처의 특수한 상황, 예산담당 공무원의 의견 반영 필요. 이를 위해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간소화안)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와 연관성 있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 (전수조사안) 모든 사업을 일정기간 검토 후 대상사업 포함여부 판단하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포함될 지의 여부를 판단. 어떤 안을 선택하든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개별 부처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대상사업 선정과정에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호 개방, 자율적인 선정을 위한 유인을 개발, 대상사업 선정 시 성별영향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주어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는 대상사업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상황과 내역에 관한 회계정보 취합이 필요함. 현재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지출 내역이 체계적으로 보고되거나, 축적되는 시스템 부재한 실정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시스템)내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들에 일정한 분류 코드 부여, 별도 관리하는 독립적인 계정 만들어 지출내역 정보를 실시간 취합,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별수혜정보를 예산집행 시점에 즉각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결산 및 환류과정 중에는 성인지결산서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하고, 성인지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성평등 개선효과가 큰 사업 또는 성별격차 큰 사업을 분석

하여 홍보하고,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감사원 감사의 의무화, 예산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제안3) 맞춤형 교육 강화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제고임. 그러므로 관련 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의 경우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인사에서 여성관련 사업 담당의 직군을 만들거나, 적어도 1년 이상의 업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작성 지침과 양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교육 강화가 필요함.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분석결과 일부 항목에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하락했던 난이도가 3차 조사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 시점에서 변화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작성 지침과 양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쩔 수 없이 변화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4) 각 부처 기획재정 담당자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대한 역할 및 비중 강화

- 기획재정 담당자들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응답(1차 조사결과 11.8%, 2차 조사결과 0%, 3차 조사결과 33.3%) 하였으며, 제도 효과의 일부를 양성평등 예산규모의 증가로 생각

하고 있음. 이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처의 기획재정 담당자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적지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양성평등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각 부처 기획재정 담당자의 역할 및 비중을 강화한다면 제도의 긍정적인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임.

## 제안5)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매뉴얼 개선 및 해설서 발간

- 성인지예산서 매뉴얼 제작에 풍부한 자원 배치 및 매뉴얼을 통한 성인지예산 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년에 이어 재확인할 수 있었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 예산편성과의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매뉴얼을 참조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1.8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작성자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경험이 많을수록(-0.4), 매뉴얼을 참조하는 경우(-0.9) 난이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매뉴얼을 통한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제도의 경과나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한편 일반 예산서 작성 교육과 별개로 5월에 실시되고 있어 예산편성 기간이 6월 20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기간이 너무 촉박한 실정임.
- 또한 컨설팅 및 교육의 혼재로 인하여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강사와 컨설턴트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계속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음. 따라서 매뉴얼 제작에 풍부한 자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작성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도 개선을 위해서는 매뉴얼을 반드시 읽고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제도가 성숙해가면서 당해연도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작성된 매뉴얼 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념과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해설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도 필요함.

## 제안6) 성과관리 지표(사업별 성평등 지표)의 다양화

- 성평등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예산의 증감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작성되는 있는 성인지예산서의 부처별, 사업별 성평등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며, 어떠한 전략적·단계별·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지적되고 있는 실정. 이에 분야별 성과관리 지표 풀을 구축하고, 성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 뿐 아니라 질적인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됨. 즉, 집행결과뿐만 아니라 집행과정도 평가할 수 있는 성과목표/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실제로 프랑스 감사원이 통합정책보고서에 대해 질적 평가를 실시하듯이 계량적 성과지표 뿐 아니라 질적 평가 지표도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제안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 및 지역별 컨설팅 시스템 구축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개선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여건을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발과 필수와 권장, 여정과 성별 구분 등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이에 따른 방법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대상 부서 등 사업선정 과정에 따른 각 조직들의 역할 확립과 체계가 세워져야



함. 예산부서가 주도하되 여성정책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지방의회와 NGO 모니터링을 통한 지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거시적으로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방안을 통해 지역 성평등을 제고시켜야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일정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기 전으로 조정하고, 작성양식 및 작성단위가 성인지예산서 보다 포괄적으로 시행될 때 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성인지예산 편성 단계 이전의 사전 교육 강화되어야 함. 성인지예산 교육 운영 확대 및 참여를 유도하고 성인지예산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점수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별 컨설팅 운영 확대는 물론 단년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성인지예산서 심의 및 NGO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제안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예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나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단위의 임기를 주기로 교체되면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인지예산을 심사했던 의원이 결산 심사 시 담당 의원이 아닌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등 상시적인 심의기능 강화가 필요함.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시키고,

국회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실시를 위해 상시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쟁점 및 이슈를 형성하여 의원들의 관심 촉구와 부처의 적극적 태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언론 홍보 및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 내용을 강화(간접 심의기능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집행 및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간접 심의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울러 심의 결과 활용방안을 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형성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감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공감대가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4 기대효과

-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하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은 다양한 기법이 이용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익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매우 복잡 다양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시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는 국회 관계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및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개선수요가 있었음. 해당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안착 및 제도 시행 역량 형성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재정의 다차원적인 제도설계와 시의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며,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발전적 시행 방안 모색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 및 내실화는 물론 중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 분석』.
- \_\_\_\_\_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_\_\_\_\_ (2011),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_\_\_\_\_ (2011),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_\_\_\_\_ (2012),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_\_\_\_\_ (2012),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각 연도).
- \_\_\_\_\_,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각 연도).
- 김영숙 외, 『2010~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패널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한민국정부, 성인지예산서 (각 연도).
- \_\_\_\_\_,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각 연도).
- \_\_\_\_\_, 성인지결산서 (각 연도).
- 임주영 외(2012),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석진 외(2012), 『2011~2012년도 성인지 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가원외(2011),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3), 『지방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정착방안』, 여성가족부.
- 조선주 외(201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안전행정부 (201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예산개요 및  
기금운용개요-」.

윤영진 외(2007),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황정임 외(2012),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예산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2012년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과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과 외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244개 시·군·구

---

---